

정사실화하는 병진 노선 채택과 핵 무력의 완성에 주력

- 병진 노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 경제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았음. 강력한 대북 제재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12년 6.28 조치 이후 북한 내부 경제개혁을 준비 중
- 핵실험의 성공 등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이 비교적 단기간 내 향상되었다는 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 추구하게 된 계기
- 핵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협상 칩으로서의 핵 개발이 아니라 핵 보유와 경제개발의 양립 가능성에 초점
- 핵 무력 완성 이후 불완전한 핵 개발과 경제지원 패키지로 협상에 임했던 이전과는 달리 핵 무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고 미국과는 대등한 관계에서 평화협정 및 핵 군축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 비핵화 전략

- 비핵화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선대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 완성 이후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려는 전략으로 전환
- 2017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강경한 대응 이후 2018년부터는 출구전략을 모색
-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에 호응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보장이 확보된다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공표
-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18.4.20)에서는 병진 노선의 완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 병진 노선 완결의 자신감으로서 핵무기 병기화 실현에 따른 핵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무기 불사용 등 비핵화 방안을 제시

-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가운데 대등한 입장에서 핵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도 내포
- 이러한 핵 동결 선언과 함께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는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완전한 비핵화 가능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 나름대로 북미 관계개선과 체제보장에 대한 ‘빅 픽처’를 그림.
- 다만 그간 북미 신뢰 관계를 감안,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을 강조
- 상응 조치는 외적 체제 안전에 관한 조치보다는 우선적으로 대북 제재 철폐 등 내적 체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에 고무된 북한은 트럼프 첫 임기 내 모든 프로세스 완료 등 빠른 비핵화 천명
-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비핵화 협상에 활용하려는 입장에 핵 문제에 있어 ‘통미 봉남’을 내세우던 과거와는 달리 남한을 중재자로 활용하기도 함.
- *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시설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비핵화 조치에 남북이 합의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으로 비핵화에 따른 남쪽으로 부터의 안보위협을 상쇄한 것도 특징
-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와는 달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비핵화 전략에 제동
- 북한 외무성(‘19.5.24)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지 않으면 대화 재개는 없을 것이고 핵 문제 역시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엄포
- 미국은 자신들의 선의의 조치(핵·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미군 유해송환 등)에 상응한 조치로 화답하지 않고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인위적 결렬로 몰고 갔다며 미국에 회담 결렬의 책임을 전가
-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올해 말까지 시한을 설정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미 비난 등 전방위 여론전을 지속

- 지난 4월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해제 때문에 회담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 공표
-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며 자위권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면서 폼페이오·볼튼 등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할 것을 주장
 - * “하노이 회담의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는데 폼페이오가 아닌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길 바랄 뿐”(‘19.4.18, 중통, 권정근 외무성 국장 인용)
 - *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 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야 할 것”(‘19.5.20, 중통, 최섉희 제1부상 발언 인용)
- 트럼프·김정은 사이와 관련해서는 희망적 입장을 표출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두 정상 간의 Top-down 방식을 여전히 선호
 - *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여전히 좋으며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19.4.18, 중통)
- 다만 대북 제재 지속 유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등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북미 대화 재개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임.
- 북한 외무성은 “제재는 그 자체가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국제적 정의에 대한 우롱인바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주장(‘19.5.16)
-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 호 억류와 관련해서는 유엔 북한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극단적인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며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항변(유엔 대북 제재 위반 대 6.12 위반 논쟁)
-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하는 등 북핵 협상을 대선까지 장기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

-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을 것임. 과거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었지만 지난 2년간은 없었음. 나는 이런 현상이 좋으며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 쓰지 않음.”(‘19.5.27,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 김정은 정권의 핵 협상이 과거와 다른 점

- 과거 탈냉전 직후 북한은 자주권과 생존권 차원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으나 김정은 집권 시기는 세습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핵 정책을 결정
- 선대에는 핵무기 개발 의지를 과시하되 실제 능력이 없었음. 따라서 핵 능력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불투명을 유지하는 모호성을 구사
-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실제 핵무기 개발에 박차
- 과거에는 핵 프로그램과 경제지원의 교환 형태로서 협상이 전개되었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핵과 체제 안전보장 간의 직접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
- 과거에는 살라미 전술에 따라 협상 칩을 세분화하였으나 최근 북한의 태도는 단계적/동시 행동만 확보되면 완전한 비핵화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

3 김정은 정권의 경제집중 전략 평가

□ 집권 초기 경제정책

- 집권 초기 인민 생활 회복을 위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방침(6.28 방침)을 통해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책 제시
- 국영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가족 또는 소규모의 작업단위로 토지이용, 시장수요에 의한 생산과 생산물 처리 자율화 등
- 2014년 5.30 담화를 통해 기업책임관리제 및 분조담당책임제 등을 도입
- 2013년 11월 각도에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설치, 2014년 7월,

6개의 경제 개발구 발표, 대외경제성 신설 등 대외개방과 투자유치 정책 발표

□ 병진 노선 채택과 종결

- 2013.3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의 결정서를 채택한 다음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 법령화
 - 병진 노선의 채택 배경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적 필요성과 경제개선 조치 등을 병행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
- 그러나 2016년 이후 핵 개발이 본격화되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경제전략에 한계 노정
 - 2016년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 등이 모두 중단되었는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 경제개혁과 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
 - 이에 따라 서둘러 핵개발을 추진하고 병진 노선을 종결한 후 다시 사회주의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전환
 - 이후 경제 분야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병진 노선을 폐기함으로써 정치 및 군사영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모순을 차단하였으나 대북 제재가 기다리고 있었음.

□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

- 대북 제재 아래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 자립경제발전을 내세우며 자급자족을 통해 버티기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오늘 역사에 유례없는 가혹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영원히 승리를 떨쳐나갈 것”(18.11.9, 노동신문)
-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일반적으로 제재가 계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걸쳐 제재의 효과가 확산 될 것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됨.
 - 2016년-2017년 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5건은 북한 수출의 80-90%를 제한하고 있으며 원유 등 수입 차단, 합작투자 및 금융 활동 금지, 해외파견노동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 여러 연구보고에 따르면 제재의 효과로 경제 성장률 하락,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 상승, 대중 수출과 수입 하락을 통한 대중무역수지 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 앞으로 무역이나 산업 등 자원 배분의 왜곡 등을 넘어 시장 등 민생경제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대북 제재의 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 불 배제
- 대북 제재가 경제 분야를 넘어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북한의 식량난·물자난 등을 가중
- 2020년은 당 창건 75년, 5개년 경제개발(2016-2020) 완료의 해인바 자력 경제 회복을 독려하여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영향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

4 전망 및 대응 방향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선과 대외개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안보적 이유로 인해 상호 모순성이 있는 핵 개발-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취함으로써 경제 희생의 기회를 상실
- 핵 무력 완성에 따른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추가제재가 없더라도 향후 1-2년 사이에 대북 제재의 누적효과가 일정 부분 시현 될 가능성
-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며 비핵화를 조속히 앞당기기 위해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임.
- 상호 장외 비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북미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진 것은 아님. 트럼프-김정은 Top-down 방식의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음.
- 협상 당사자 간의 비방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상황 악화조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하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과 병행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미국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건조성과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함.
- 하노이 회담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새로운 협상 전략을 건의할 사람이 없는 것은 문제이며 강경 군부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는 측면
-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이 도움이 되겠지만 비핵화 협상이 미중/미러관계의 국제 정치 역학과 맞물리게 되면 오히려 대미협상에 있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를 잘 활용해야 함.

-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조속히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하여 남-북-미 Top-down 방식을 재건
- 대북 제재 유지에 따른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바 제재완화 이외의 상응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을 다시 불러들일 필요

*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인적교류, 연락사무소 설치 등

○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경직적인 태도로 일관

- 그동안 모든 협상을 주도해왔던 통전 라인이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쇠퇴하면서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를 co-ordinate할 부문이 없어짐.
- 남북 대화 뿐 아니라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북한의 통미봉남 현상이 심화

* 일부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대화가 다시 진행되기 전까지는 대남관계도 진전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

-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반전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북 제재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함께 국제적 고립 심화 가능성
-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대북지원 제안 등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에서 모멘

텀을 확보하고 대미 관계를 복원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를 기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어야 함.

- 조속히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함.
-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며 6월 트럼프 방한 계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남북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임.
- 대북정책과 평화 노력이 정치적, 이념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도 미래지향적으로 고려
- 대북강경론, 협상회의론, 북한 핵 포기 불가론 등에 대응한 전방위적 대미 공공외교도 중요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1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및 경제집중 전략

1) 미국은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외교적 레버리지로 생각하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가시적인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대북 제재가 과연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는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김정은은 병진 노선을 중단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한의 리기성 교수는 이례적으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GDP 규모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북한은 경제건설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곧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국가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농업생산량이 단기간 증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적 의지와 국가능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괴리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인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1) 신한반도 체제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면서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평화경제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큰 틀에서는 한국사회와 남북한이 합의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재완화 이후에서 신경제구상에 대해서는 남북한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화경제 구상에서 실질적인 방해는 북미협상의 진척상황이기보다는 한국사회 내부와 남북한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남북한 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식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 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모델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90년대 이후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은 북한 경제보다는 오히려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남북경협은 결국 민간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민간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협을 진행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고 한반도 정세가 변화되면 갑작스레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경제협력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역시 중요한 데, 누가, 어떻게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만약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의 주체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1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

1. 서언

제1회의 두 발표자의 발표문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는 앞으로 한국과 한반도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민족 미래의 대강’이라 할 수 있는 중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100년(1919~2019), 즉 구 한반도체제는 일제의 강압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에 둔 미국의 대소·대중 전략의 그늘 밑에서 한반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묻어야 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며 그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책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구상과 비전 그리고 전망에 대한 논의는 민족의 장래와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이를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종말’, ‘신태평양체제의 출범’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임

○ 양무진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정세를 시계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분석하여, 지금의 한반도의 위상을 통찰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음

-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경제집중 전략에도 불구하고 교착국면을 맞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까지 뒤얽혀있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 비핵화는 국제적 이슈이지만 현재는 북한과 미국의 이슈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며, 북미 간의 교착국면은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계속해서 북미 이슈로 제한할 것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슈로 확대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보여짐
- 더욱이 북한은 올해를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국가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촉진자’ ‘중재자’에서 ➡ ‘당사자’로?!

2. '샌프란시스코 제제의 종말'이 오지 않았던 이유

- 1919년 3.1운동을 전개했으며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했으나 강점기 국내의 난관과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함
-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드디어 일제의 탄압을 끝내고 새로운 독립된 세상을 만들고자 했으나,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일본 전후처리를 결정하는 샌프란시스코 회의(1951)는 일본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배상금조차 없는 결말을 맺음
- 샌프란시스코 제제는 사실상 소련의 공산화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이며, 따라서 소련 해체 이후 종말을 고했어야 하지만 북한 핵 문제가 발발하면서 마치 소련의 공산화 망령이 살아 있는 것 같은 '플라시보 효과'가 한반도 주변에 잔재해 왔던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음
- 결국 북한의 비핵화란 무엇을 의미할까?
 - 남북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태평양체제, (2차대전)전후체제의 변동 의미하게 됨
 - 즉,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것으로 소위 '신태평양체제'로 부를 수 있을 것임
 - ➔ 이는 신한반도체제의 본질적인 의미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신한반도체제의 모습: 외교, 군사안보, 경제

- 가장 먼저, 외교적 동맹 관계의 변형이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 냉전 해체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미, 일과 수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에 반해 남한은 90, 92년 소련, 중국과 이미 수교
 - 이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불균형한 동아시아 구조가 지속되었던 것 (즉 북한은 핵 문제로 인해 냉전 후 지난 30년간 미, 일과 수교를 맺지 못함)
 -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 북일수교로 이어질 수 있고 동아시아 질서의 변형을 의미
 - ◆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정도임 (160여 개국과 수교)
 - 즉, 북미, 북일 수교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군사 안보적인 동맹 관계의 변형이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 냉전 시기 남방 삼각(한미일) VS. 북방 삼각(북중러)관계의 대립 구도는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체제임. 한미/한일 군사동맹과 북러/북중 군사동맹이 대립 구도를 형성
 - 그러나 수교과정 또는 그 이후에는 기존의 군사동맹 의미가 퇴색하게 되며, 새로운 군사동맹체제 불가피 ➔ '다자간안보협력체제'로의 변화 불가피할 전망

◆ 새로운 체제에서는 군사적 대립보다는 무역 경쟁 등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음

○ 경제적으로는 주변국가들의 대북투자와 경험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 이미 세계의 주요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

(짐 로저스)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

- 북한은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2018년) 27개 중앙급-지방급 개발구 설명회 / 원산-금강산지구 투자설명회 등

- 그러나, 인프라가 미비하여 외국기업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기금을 이용한 인프라투자와 한국기업투자가 협력적으로 참여할 경우 우리에게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준비단계, 시험단계를 거쳐 새로운 ‘신태평양체제’에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전망

4. 과제

○ 비핵화와 신뢰: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신뢰회복의 문제

- 정밀한 비핵화 VS 신뢰하는 비핵화 :

1) 비핵화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할 것인지 (FFID, CVID)?

2)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하고, 그것을 믿을 것인지?

3) 1) + 2)를 할 것인지? 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즉, 신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임.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 수교 또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한 물리적 관계 변화 / 공동의 관심과 관리 등

○ 미국과 일본 보수진영(또는 정부) 의 저항 가능성

- 미국 내 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구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체제에 익숙한 보수진영의 반대여론을 돌릴 방법 마련 필요

- 일본의 보수 정부가 지속되는 한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변화 그리고 북미 관계의 변화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

- 공식 외교 및 공공외교 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에 장애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한국정부의 당사자론

- 한국정부는 조절자, 중재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임. 유엔의 제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완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1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과제와 노력

○ 한반도 비핵화의 현 상황

-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러한 기대는 남북 모두에게 남북경협과 평화와 번영 등에 대한 벅찬 꿈으로 이어졌음
-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이 모든 기대와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되었고 우리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음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당 정치국회의와 당 중앙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회의들을 통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
- 북한은 전임 내각 총리 박봉주를 당 부위원장으로, 자강도당 위원장 김재룡을 내각 총리로 하는 파격적 인사를 통해 경제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노정
- 한편, 새로 구성된 국무위원회에 김영철, 리용호, 최선희를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미협상실무진의 위상을 강화하고 추후 대미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 선전선동부문에서 지난시기 5대 교양에 자력갱생 교양을 추가함으로써 대북제재국면에서 조직 강화와 사상강화를 완성하고 대북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
- 북한은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지도부의 메시지를 발표
- 지난 5월 4일과 9일에는 북한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을 압박, 한편 미국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회담이 아닌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

-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삼지연군건설과 금강산-갈마국제관광지구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 등 추진
- 경제 모든 부문에서 올해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생산증산운동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설 것을 격려
- 결국,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처하여 대내·대미 전열을 정비하고 ‘자력갱생’을 내부적으로 강조하면서 생산증산운동을 추동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
- 한편,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하면서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일체의 남북접촉과 왕래도 거절
- 이제 우리에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중재자’의 행보를 이어가는가, 아니면 ‘중재자’의 역할은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가 하는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 지난 5월 2차례에 걸친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
- 정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식량 지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나름 노력
- 일부에서는 북한이 올해 15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설이 등장하고 이에 반하여 북한 내 시장에서 쌀값이 오히려 내려갔다면 식량부족은 잘못된 평가라는 설도 등장
-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온갖 시도를 차단하고 북한의 농업구조와 실태를 감안하여 동포라는 입장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단순히 대북 퍼주기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으로 추진

- 9.19 평양 공동선언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
- 최근 북한의 대남동향에는 남과 북이 지난해 9.19 평양에서 채택한 공동선언 불이행에 대한 불만족도 일부 내재
- 91.9 평양 공동선언 5조 2항에서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언급했고 이에 따르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
- 지금 한미가 ‘워킹 그룹’을 작동시키고 있다면 남북도 9.19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발표 하는데 그치지 말고 남북 ‘워킹 그룹’을 뚝고 가동시켜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함
- 한미 간 ‘워킹 그룹’과 남북 간 ‘워킹 그룹’을 가동시키고, 어느 시점에서는 남북미 ‘워킹 그룹’이 가동되어 남북미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적으로 추진
-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 중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운명과 평화·번영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함.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1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민영기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전략 토론문

민영기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현재 상황

-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장기전 태세로 돌입한 듯 보임.
- 북한 확실한 체제보장,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미국은 선 비핵화와 후 관계개선, 북한입장에서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음
-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딜을 개시한 김정은 정권의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단계별 비핵화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미 간 국교 수립과 체제보장에 접근하겠다는 의도임
-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 5월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낮은 수준의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미국이 압류하여 사모아에 억류 중인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 사건도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있음
- 북한의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는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천명하였으며 그 시한은 올해 말로 못 박았음.
- 북·미 간의 양보 없는 강경대립은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음. 북·미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열리지 않은 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임. ‘한반도 운전자’에 걸맞는 소임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패널 질의

- 북미의 협상 교착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방한의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개시된 지금, 미·중 갈등이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북만 합의로 경제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 촘촘하게 짜여진 대북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협력사업이 시도될 수 있는가?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2 :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트럼프의 비핵화 빅딜 전략

| 발표 1 :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